

# 참정권 획득과 감성 정치

- 일제 말 이광수의 친일 협력의 목적과 방법\*

배개화\*\*

## 목차

---

1. 서론: 총력전, 국민화 그리고 이광수
2. 이광수의 친일 전략: 징병제와 참정권의 거래
3. 내선일체를 통한 제국 정치에의 참여 추구
4. 감정의 공동체의 상상과 그 이율배반
5. 결론: 일제의 죽음의 정치에 대한 협력

## 〈국문초록〉

일제 말 이광수는 참정권을 획득하여 제국의 통치 행위에 참여하기 위해서 친일행위를 하였다. 중일전쟁(1937.7) 전까지 조선인은 조선의 지방 의회를 제외한 식민지의 중앙 및 일본 제국의 정치에는 참여할 수 없었다. 이광수는 참정권 획득을 위해서 조선인들에게 일본 군인으로 참전하여 목숨을 바칠 것을 요구하였고, 일본에게는 참정권을 병역 의무와 교환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는 또한 신(新)일본 민족을 '사랑'이라는 도덕 감정에 기초한 감정의 공동체로 상상하면서, 조선인은 그 공동체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일본인과 같이 참정권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일본은 조선인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데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광수의 친일 협력은 일본 제국의 조선인에 대한 죽음의 정치에 협조하는 것이 되었다. 이러한 사례는 '시민'이라는 지위가 제국과 식민지 사이에 존재하는 정치 역학·대립 혹은 협력의 중요한 요인이며, 제국주의는 본질적으로 식민지인에게 시민의 지위를 부여

---

\* 이 연구는 2015학년도 단국대학교 대학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 단국대학교 교양학부

할 수 없는 체제임을 보여준다.

**핵심어** 이광수, 친일, 참정권, 통치성, 사랑, 감성 정치, 죽음의 정치

## 1. 서론: 총력전, 국민화 그리고 이광수

1937년 7월부터 시작된 일본의 전쟁은 1941년 12월 태평양 전쟁으로 확대되었다가 1945년 8월 일본천황의 무조건 항복 선언으로 끝나게 된다. 이 전쟁은 총력전 즉 전쟁 수행을 위해서 국가의 물적 그리고 인적 자원이 총동원된 전쟁이라고 불린다. 일본의 식민지 조선도 총동원에서 예외가 아니었다. 식민지 조선은 일본의 병참 기지의 역할을 했으며, 조선인들도 일본의 전쟁 수행에 다양한 방식으로 동원되었다.<sup>1)</sup>

현재의 연구자들이 친일 협력자로 부르는 식민지 엘리트들은 일제의 정책을 조선인을 일본 국민으로 만드는 것으로 해석했다. 특히, 이 논문의 연구 대상인 이광수는 의무교육실시, 창씨개명, 그리고 특별지원병령을 통해서 내선일체, 즉 조선인이 일본국민으로 통합되는 기초가 마련되었다고 주장하였다.<sup>2)</sup> 그는 또한 조선인에게 일본 국민의 정당한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일본의 전시 정책에 적극 참여할 것을 독려했다.

이광수의 친일행위에 대한 초기의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김운식은, 이광수가 어릴 때 고아가 된 것과 식민지라는 상황 때문에 '고아 의식'을 갖게 되었고 천황의 양자가 됨으로써 이 의식을 극복하려 한 것이 그의 친일행위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sup>3)</sup> 또 다른 전문가인 이경훈은, 이광수의 친일 행위

1) 방기중, 「1940년 전후 조선총독부의 신체제 인식과 병참기지 강화정책」, 『동방학지』 138, 2007, 97면.

2) 이광수, 「의무교육과 우리의 각오」, 『매일신보』, 1940.8.28; 『춘원 이광수 친일문학 전집』 2, 이경훈 편역, 평민사, 1995, 89-90면.

는 고아의식 혹은 아버지 찾기와 같은 심리적 원인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민족개조론>의 계몽주의의 결과이자 친일 부르주아지의 전망·정치적으로는 대동아공영권의 지도자, 경제적으로 종속 자본주의와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sup>4)</sup>

이후, 이광수의 친일행위의 이유를 계몽주의와 연관해서 논하는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출판되었다. 김현주는 이광수의 친일행위를 1920년대 민족개조론에 내재한 '문화적 파시즘'의 발현이라고 보았으며,<sup>5)</sup> 김재용은 '계몽적 민족주의'에 내재한 국민주의의 결과로 보았다.<sup>6)</sup> 최주한도, 민족개조를 주장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광수는 국민주의의 전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중일전쟁 이후에는 일본인과 운명공동체가 되어 대동아공영권 건설에 참여하고자 했다고 주장했다.<sup>7)</sup> 반면에 방민호는 <육장기>를 발표한 시기부터 그의 친일로의 전향이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그 이전과 이후를 논리적으로 불연속성이 있다고 주장했다.<sup>8)</sup>

조관자는, 이광수가 민족의 힘을 욕망한 '친일 내셔널리스트'라고 규정하고, 일본 제국의 국민을 자처했던 이광수의 협력 논리는 일본 내셔널리즘의 식민지 버전이며, 중일전쟁 이후 점점 확대되어 가는 일본의 국가적 팽창에 편승, 협력하여 '민족의 힘'을 성취하고자 하였다고 주장하였다.<sup>9)</sup> 서영채는, 이광수가 민족의 보존을 위해서 친일협력을 했다고 변명하였지만, 그의 논리는 "민족 없는 민족주의"였을 뿐이며, 서양제국주의에 맞서는 의로운 대동아주의자라는 일제의 전시 이데올

3) 김윤식, 『이광수와 그의 시대』 2, 솔출판사, 1999.

4) 이경훈, 『이광수의 친일문학론 연구』, 태학사, 1998, 21-28면, 356면.

5) 김현주, 『이광수의 문화적 파시즘』, 『현대문학의 연구』, 14, 2000, 11-45면.

6) 김재용, 『국민주의자로서의 이광수』, 『이광수 문학의 재인식』, 소명출판, 2009, 197-199면.

7) 최주한, 『1930년대 전반기 이광수의 지도자론과 파시즘』, 『어문연구』 35-2, 2007.9, 293-317면.

8) 방민호, 『이광수 장편소설 『사랑』에 나타난 종교통합적 논리의 의미』, 『춘원연구학보』 2, 2009.12, 132-133면.

9) 조관자, 『"민족의 힘"을 욕망한 '친일 내셔널리스트' 이광수』, 『해방전후사의 재인식』, 책세상, 2006, 524-555면.

로기를 윤리적인 과제로 받아들였던 것이 친일의 원인이라고 주장하였다.<sup>10)</sup>

기존의 연구는 대체로 이광수의 친일행위를 계몽적 민족주의의 논리적 귀결로서 파악하고, 그의 독립 운동과 일본의 동화 정책에의 협조는 모두 동일한 사상의 토대 위에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이 연구들은 그의 친일 행위 자체는 중일전쟁(1937.7) 이후 혹은 안창호의 사망(1938) 이후 시작되었다고 본다. 즉, 이광수가 이전까지는 조선의 독립을 배제하지 않았으며, 중일전쟁 이후 일본의 대아시아주의(대동아공영권)에 편승하여 일본 제국의 경제적, 정치적 이익을 나눠 갖고자 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들은 이광수의 친일행위를 '정치적' 전향의 결과로 본다. 그러나 이 논문은 이광수의 친일행위를 이전의 정치적 지향과 연속적인 것이며, 그의 친일 행위는 참정권 즉 국민으로서 직접·간접으로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의 획득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였다고 본다. 이광수는 1924년부터 『민족의 정론』이라는 글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일본 제국의 통치권 내에서 정치적 단체를 구성하고 자치권 혹은 참정권을 획득할 것을 주장했다. 이후, 조선의 정세의 변화와 함께, 그는 자치권 획득 운동에서 참정권 획득 운동으로 전환하였고, 일제 말에는 일제의 전시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함으로써 참정권을 획득하고자 하였다. 이광수에게 참정권 획득은 제국과의 정치 역학-협력 혹은 대립-의 중요한 요소였다.

참정권 획득은 민족을 근대적 주체로 개조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다. 민족 전체를 자기가 원하는 근대적 인간으로 개조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행위를 규정하고 개인을 특정한 목적이나 지배에 종속시켜 주체를 객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sup>11)</sup> 근대에서 이처럼 타인들을 특정한 목적에 맞게 규율하는 주체는 국가였으며, 근대 국가는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통치 기술-푸코의 용어로는 "통치성"(governmentality)-을 개발했다.<sup>12)</sup> 민족을 근대주체로 개조하기 위해서는 필

10) 서영채, 『민족 없는 민족주의』, 『아침의 영웅주의』, 소명출판, 2012, 77-116면.

11) 이 같은 '권력의 테크놀로지' 혹은 '통치성'의 주체를 기존 연구에서 '식민지 규율권력'이라고 부르거나 '생명관리권력(bio-politics)'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연적으로 권력과 정치적 공동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광수는 처음에는 자치권 운동으로 그리고 이후부터는 참정권 획득 운동을 전개하였다.

참정권 획득 운동은 조선의 식민지성을 부정하고, 조선인이 일본 제국이라는 근대국가의 주체가 되는 것을 목표로 했다.<sup>13)</sup> 참정권은 조선인이 제국의 시민권을 획득하고 제국 경영에 일본인과 대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는 통행권이었다. 이를 위해서, 이 운동세력들은 신일본 민족의 한 부분으로서 일본 제국 내에서의 공생(symbiosis)을 지향했다. 특히 이광수는 이 공동체가 사랑 혹은 상애에 토대를 둔 감정의 공동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광수의 친일논리가 보여주듯이 이러한 주체는 '미메시스적 주체'<sup>14)</sup>로서 자기 보존을 위해서 자기를 망각하고 타자에 동화되는 주체였고, 그런 만큼 여전히 식민지성을 내포한 주체였다.

## 2. 이광수의 친일 전략: 징병제와 참정권의 거대

총력전 시기 일제의 정책은, 개인이 국가의 세력 강화에 기여하는 한에서만 국가는 그를 통치의 대상으로 인식한다는 푸코의 주장을 환기시킨다.<sup>15)</sup> 한일병합 이후 오랫동안, 일본 제국은 조선인을 일본 국적의 외지인으로 규정하고 일본인과 동일한 국민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다. 하지만, 1937년 중일전쟁 이후 제국은

12) M. Foucault, *Technologies of the Self*, ed. by Luther H. Martin et al., Amherst: The University of Massachusetts Press, 1988, p.19.

13) 이나미, 「일제시기 조선 자치운동의 논리: 독립운동론, 참정권론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44, 2006.6, 419-457면.

14) 정호근, 「사회구성체 지배의 연관: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의 『계몽의 변증법』을 중심으로」, 『철학 사상』 16, 2003.6, 160-161면.

15) M. Foucault, Op.cit., p.152; "I would say that in this kind of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dividual and the state, the individual becomes pertinent for the state insofar as he can do something for the strength of the state"

조선인들을 전쟁에 동원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조선인에게 일본 국민이라는 의식을 심어주려고 하였다.<sup>16)</sup> 1942년 이후로 일본 정부는 조선을 내무성의 직접 관리 하에 둬으로써 내, 외지의 행정적 구분을 해소하였다.<sup>17)</sup>

일본은 조선을 지배가 아닌 통치의 대상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점은 여러 가지 글에서 확인된다. 우선 미나미 총독은 전시총동원의 목표, 즉 동아신질서의 건설을 위해서 조선 사람이 완전한 황국신민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18)</sup> 녹기연맹 간부인 츠타 츠요시(津田剛)도 “조선이 세계사의 전도를 기능하는 중대한 시금석이라고 [말하거나] 신동아 건설의 핵심은 내선일체의 완성이라고 할 때, 그것은 아시아에서 전 세계로 가는 소위 팔괘일우(八紘一宇)적 팽창에 관련된 조선의 중요성을 의미 한다”라고 주장하였다.<sup>19)</sup> 이는 일본은 중일전쟁 초기부터 대륙에서의 전쟁을 지원하는 병참기지로서의 조선의 중요성을 인식하였으며, 그런 만큼 조선을 통치의 대상으로 보기 시작했음을 보여 준다.

일본은 조선인을 전쟁에 동원하는 데 필요한 법률을 차례차례로 개정하였다. 우선 1938년 일본인만이 일본 군인이 될 수 있다는 병역법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특별지원병령’을 공포하였다. 이에 따라 조선인도 군대에 지원병으로 특별히 입대

16) 당시의 일본민법에 따르면 조선인인 일본국적의 외지(조선 법역)인이었다. 외지는 식민지를 지칭하는 일본의 공식적인 법률 용어였다. 이승일, 『일제시기 조선인의 일본국민화 연구』, 『동아시아 문화연구』 34, 68-69면, 75-76면; 또한 조선총독부는 1939년 창씨개명을 결정하기 전까지 조선인의 일본 성(姓)으로의 개성명(改姓名)은 엄격히 금지하였다; 미즈노 나오키, 『조선 식민지 지배와 이름의 차별화: 재지인과 혼동하기 쉬운 이름의 금지를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59, 2001.5, 172면.

17) Mark R. Peattie, “Attitudes Towards Colonialism,” *The Japanese Colonial Empire, 1895-1945*, ed. by Ramon H. Myers and Mark R. Peattie, Princeton N. J.: Princeton University Press, p.124; The colonial ministry was abolished in 1942, and the administration of Korea was brought under the control of home ministry in 1942.

18) 미야다 세츠코(宮田節子), 『조선민중과 황민화정책』, 이형량 역, 일조각, 1997, 160-162면; 정창석, 『절대주의 천황제의 공간적 확대』, 『일본문화학보』 37, 2008.5, 382면.

19) 津田剛, 『內鮮一體の基本原理』, 京城, 綠旗聯盟, 1939, 87-88면; 이경훈, 앞의 글, 168면에서 재인용.

할 수 있게 되었다. 1939년에는 씨족을 표시하는 단위인 성(性) 중심의 조선의 호적제도를 가족을 표시하는 단위인 씨(氏) 중심의 일본 호적제도로 개정하였다.<sup>20)</sup> 이에 따라 1940년 초까지 80프로의 조선인들이 일본식으로 성과 이름을 고침으로써 서류상 조선인과 일본인을 구분하는 법적 표시가 없어졌다. 여전히 조선은 일본과는 구분되는 '조선 법역'으로 남아있었지만, 조선인의 일본 호적으로의 이동이 과거처럼 엄격히 제한되지 않았다.<sup>21)</sup>

일련의 정책에 대한 이광수의 관점은 『동포에게 고함』에 잘 표현되어 있다. 이 글은 이광수가 동포인 일본인에게 쓰는 편지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일한병합 이후부터 지금까지 [조선인과 일본인은 동등하다는] 양 민족의 약속은 사실 가짜였다”는 도발적인 문장으로 시작되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14, 5년 전에는 왜 나에게 참정권을 주지 않는가. 그러니까 일시동인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는데, 그 후 더욱 실제적이 되어서 나는 이런 식으로 추리하게 되었네. 즉, 만일 반도인을 진짜 일본 신민으로써 평등하게 취급한다면 우선, 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며, 그 후 징병령을 조선에서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되면 나도 일시동인(一視同仁)의 대어심(大御心)에 따라 조선이 통치되고 있다고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sup>22)</sup>

그는 일본의 메이지 헌법이 천황과 국민의 관계를 부자관계로 그리고 일본 국가를 가족 공동체로 상상하는 것을 전제로 삼아, 조선인에게도 천황의 적자로서의 지위를 보장할 것, 즉 참정권을 줄 것을 주장했다. 이럴 경우, 그는 천황의 무차별적 사랑을 믿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sup>23)</sup> 또한 그는, 일본 제국이

20) 이승일, 앞의 글, 114면.

21) 위의 글, 110면.

22) 이광수, 『동포에게 고함』(『경성일보』, 1940. 10. 1~9), 『춘원 이광수 친일문학: 동포에 고함』, 김원모·이경훈 편역, 철학과현실사, 1997, 14면.

23) 이것은 한유(韓愈)의 『원인(原人)』에 나오는 구절로서, 성인은 천하고 먼 것에 관계없이

조선인을 식민지의 야만인이 아니라 천황 앞에 평등한 국민의 일원으로서 대한다면, 일본을 사랑할 수 있을 것이며 반역-조선독립의 마음 같은 것은 먹지 않을 것이라고도 약속했다.<sup>24)</sup>

무엇보다 이광수는, 일본은 전쟁 수행을 위해서 조선인에게 참정권을 부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았다. 이광수는 첫째, 조선이 제국의 병참기지가 되는 것은 조선인의 충성이 제일 요건이며; 둘째, 조선반도는 군사적, 정치적 병참 기지에 못지않게, 산업적 병참 기지의 역할을 하며,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조선인의 애국심이 필요하며; 셋째, 만주국과 획득된 중국 영토를 방호하고 다른 나라와의 전쟁을 위해서도 일본은 앞으로 점점 더 병력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조선인에게도 참정권을 부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sup>25)</sup>

그런데, 이광수는 조선인에 대한 병역의무 부과를 참정권보다 우선적으로 요구하였다. 그는 “징병령이 실시되어 조선인 아이들이 전부 국민교육을 받고 그 장정들이 군인이 되어 총을 들고 전선으로 간다”면 조선인은 완전히 일본의 신민이 되기를 마친 것이기 때문에, 참정권은 따로 요구할 필요도 없는 것이라고 단정한다.<sup>26)</sup> 더불어, 이광수는 제국을 방호하고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

모두를 평등하게 사랑한다(聖人一視而同仁, 篤近而舉遠)는 뜻이다. 미나미 지로 총독은 ‘일시동안’을 내선일체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통치 방침으로 제시하고, 일본인과 동일한 황국 신민이라는 신념을 조선인에게 확고히 심어주어 일본의 전쟁 수행에 적극 협조하게 하였다 (전상숙, 『일제 군부 파시즘 체제와 ‘식민지 파시즘’』, 『동방학지』 124, 연세대 국학연구원, 2004, 624-644면).

24) 이광수, 『동포에 고함』, 『춘원 이광수 친일문학: 동포에 고함』, 16면.

25) 위의 글, 24면. 이경훈(1998)과 조관자(2006)는 이를 조선인 상층 부르주아지가 종속적 자본주의로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26) 위의 글, 16면. “참정권에 대해서는 왜 말하지 않는가. 그것을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은 아닐까. 의무 교육이 실시되고 징병제가 실시되어, 조선인 아이들이 전부 국민 교육을 받고 그 장정들이 - 내 아들이 말아야 군인이 되어 총을 들고 전선으로 간다. 군이여 그렇게 되면 나는 완전히 일본 신민이 되기를 마친 것이 아닌가. 그것은 형식적인 제도만이 아니네. 내 자신이 폐하의 군대에 들어가 있다면, 나는 마음으로부터 일본 신민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아닐까.”



조선인이 전체 병력의 3분의 1을 담당할 수밖에 없는 만큼, 중의원 의석의 약 4분의 1 내지 3분의 1은 조선인에게 부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27)</sup>

이렇게 징병제 실시를 참정권 획득의 우회로로 보는 전략은 1936년부터 전개됐던, 최린 주도의 '징병제 요망 운동'과 궤를 같이 한다.<sup>28)</sup> 징병제 요망 운동 세력들은 참정권 획득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면서도, 이를 위해서 조선인들에게 일본인과 동일한 병역의 의무를 부여할 것을 우선적으로 주장하였다. 징병제 요망 운동 세력들은, 서양의 근대국가들처럼 조선에서 징병제를 실시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참정권도 부여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프랑스와 같은 유럽국가에서 병역 의무가 "시민권의 한 징표(hall mark)로서 등장했으며, 시민권은 정치적 민주주의의 징표(hall mark)"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sup>29)</sup>

일본은 징병제와 참정권의 교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었지만, 전황은 일본이 조선인에 대한 징병제 실시를 결정하게 만들었다. 1941년 12월 초의 하와이 진주만 공격과 1942년 초의 싱가포르의 함락으로 전선은 태평양 및 아시아 전역으로 확대되었다. 일본은 지나친 확장 정책 때문에 전쟁 수행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의 부족을 느끼게 되었고, 징병의 실시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1942년 5월 일본 의회는 징병령을 통과시키고 이를 공포하였다. 그리고 1943년 8월에 조선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한 징병이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다.

이광수는 징병제 실시를 참정권 획득의 계기로 보고 이를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글들을 발표하였다. <군인이 될 수 있다>(*『신태양』*, 1943.11)는 이러한 기대를 아들의 죽음과 연결시켜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저번 저녁에 당신은 징병론을 주장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조선 민중이 가장 원하

27) 위의 글, 24면.

28) 지승준, 『일제시기 참정주의 세력의 '징병제요망운동'가 전쟁 협력』, 『한국민족운동사연구』 69, 2011. 12, 191-192면.

29) Morris Janowitz, *Military Conflict*, Beverley Hills: Sage, 1975, p.76; recited from Anthony Giddens, *The Nation-State and Violence*, Ber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7, p.234.

는 것은 징병령의 시행이라고 말씀하셨죠."

라고 말하며, 그 날카로운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었다.

"예,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확신을 가진 침착한 태도로 그렇게 대답했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의심하기보다는 확인하고자 하는 표정이다.

이는 실로 급소를 건드린 질문이다.

나는 손을 들어 봉일과 용삼의 자는 모습을 가리켰다.<sup>30)</sup>

주인공은 일본 제국 의회가 조선인에 대한 징병제 실시를 결정하기 14년부터 징병제의 실시를 주장하였다. 그 이유는 자신의 두 아들이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일본의 군인, 그래서 시민의 자격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에 원통함을 느꼈기 때문이다. 이런 심정은 큰 아들 봉일이 7살에 패혈증으로 죽으면서 더욱 커졌다. 봉일은 조선인은 일본 군인이 될 수 없다는 친구들의 말에 매우 큰 충격을 받았고, 죽는 순간에도 조선인은 군인이 될 수 없느냐?는 물음을 남기고 죽었다. 주인공은, 봉일이 죽은 지 10년이 지나서일망정 군인이 되고 싶다는 그의 꿈이 마침내 실현되었다고 감격한다.<sup>31)</sup> 이러한 감격은 조선의 아이들이 일본 국민으로서의 미래를 갖게 되었다는 희망으로 연결된다.

1944년까지 이광수는 징병제의 실시를 참정권의 부여와 동일시하고 조선인에 대한 징병에 적극 협력했다. 그러나 조선총독부는 징병제와 참정권의 연계를 거부하며, 조선인들의 참정권 요구는 아직 일본인으로서의 의식을 철저하게 갖고 있지 않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sup>32)</sup> 그러나 결국, 1945년 4월 1일 조선인(과

30) 이광수, <군인이 될 수 있다>([『신태양』, 1943.11) 『진정 마음이 만나서야 말로』, 이정훈 편역, 평민사, 1995, 370-371면.

31) 위의 책, 381면.

32) 司法部刑事局, 『思想月報』, 95號, 1942年 6月, 15面; recited from Takashi Fujitani, *Race for Empire: Koreans as Japanese and Japanese as Americans during World War II*, Berkeley: University

대만인)에게 투표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법률 두 개가 공포되었다.<sup>33)</sup> 이것은 전황이 일본의 패배로 기우는 상황에서 조선인을 전쟁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한 수단이었다.

이광수가 조선인에게 군대 입대를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일본에게는 징병제 실시를 촉구한 것은 1920년대 이래의 '참정권 청원 운동' 및 '징병제 요망 운동'과 연속성에 있다.<sup>34)</sup> 이 운동 세력들은 일본과 조선에 완전히 일체화하여 도쿄의 정치계에 주류가 되고자 했다. 이광수 역시 이러한 전망을 공유하여, "조선인의 국제 관념과 습성과 지력이 내지인과 동일 수준에 오르는 날, 조선인은 내지인과 다름없이 내각 총리대신도 육해군 대장도 될 것이다. 국가가 요구하는 것은 충성 있는 인재다. 조선인이니 아니 쓸 리가 없다."라고 기대했다.<sup>35)</sup> 그는 또한 앞으로 조선인은 "자신의 역량 여하로는 일본 제국의 모든 사업과 모든 광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으며," 늦어도 30년 후의 조선인의 자손은 "일본인과 완전히 평등 되고 완전히 융합한 그야말로 누가 누구인지 모르는 동포가 되어서 영광을 향유할 것"이라고도 예측했다.<sup>36)</sup>

그렇다면 조선인 중 누가 학부대신이 되고 총리대신이 될 수 있는가? 이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이광수 본인과 같은 소수의 엘리트일 뿐이다.<sup>37)</sup> 따라서,

---

of California Press, 2011 p. 281.

33) 山本有造, 『日本における植民地統治思想の展開』 2, 『アジア經濟』 32-2, 1991.2, 49면; 최유리, 「일제 말기 참정권 논의와 그 성격」, 『이화사원』 28, 1995, 307면. 최유리에 따르면, 당시 일본 의회는 세금을 15원 이상 내는 25세 이상의 조선인 납세자에게 참정권을 주기로 결정하였는데, 이는 전체 납세자의 2.3%에 불과했다. (309-310면)

34) 송규진, 「일제하 참정권 청원운동의 논리」, 『史叢』 62, 2006.3, 5-34면; 지승준, 앞의 글, 2011. 12, 191-238면.

35) 이광수, 「심적 신체제와 조선 문화의 진로」(『매일신보』, 1940.09.05.-12), 『춘원 이광수 친일 문학 전집』 2, 93면.

36) 이광수, 「황민화와 조선문학」(『매일신보』, 1940.07.06.), 『춘원 이광수 친일문학 전집』 2, 76-77면.

37) 이광수는 '민족의 힘'을 보존하고 멸망으로 가는 길을 막기 위해서 친일을 하였다고 했다. 이광수는 일제가 3만에서 3만 8천 명가량의 조선 엘리트들(소위 이광수가 말하는 중추계급)의 목록을 만들어놓고, 조선인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거나 전쟁이 일본에 불리할

이러한 예측은 일본 제국의 통치에 주체로 참가하고 싶은 이광수나 조선의 상층 엘리트 집단의 욕망을 표현하는 것일 뿐이다.

1936년부터 조선의 상층 엘리트들은 '징병제 요망 운동'을 벌여, 조선인에게 병역의 의무를 부여할 것을 일본 정부에게 요구하였다.<sup>38)</sup> 하지만 일본은 조선인의 낮은 민도와 충성심의 부족 등을 들어 병역을 부여하지 않았다. 동시에 일본은 조선인에게 병역의 의무가 없는 것을 참정권 부여를 거절하는 이유로도 이용하였다. 하지만, 중일전쟁 이후 일본 정부는 전쟁 수행을 위해서 조선인을 병역에 동원할 필요를 느꼈고 이를 실행하였다. 이광수는 이를 참정권 획득의 유리한 기회라고 판단하고, 조선인의 전쟁 협력을 적극 독려했다. 그 궁극적 목표는, 징병과 참정권을 교환함으로써 조선의 상층 엘리트들이 도쿄의 정치계에 들어가 제국 전체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다.

### 3. 내선일체를 통한 제국 정치에의 참여 추구

참정권 획득 운동은 기본적으로 조선인이 일본의 제국 의회에 의원으로 출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일본과의 철저한 일체화를 추구한다. 해방 후, 이광수는 자신의 친일 행위를 오랫동안 지켜온 절개를 버린 것이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그의 친일 협력은 사상 전향이라기보다는 「민족개조론」(1922)과 「민족의 경륜」(1924)의 사상적, 그리고 정치적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이광수의 민족개조론이 우선적으로는 국민국가의 지도자를,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기 때문이다.

---

경우 이들을 대량학살 한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는 "진실로 이 3만 명이 무슨 방법으로나 희생을 당한다면 이것은 민족적 명망에 다음가는 큰 소실일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죽여 친일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이광수, 『나의 일생』, 최종고 편, 푸른사상, 2014, 460면.

38) 지승준, 앞의 책, 191면.

이러한 궤적은, 그의 전향의 심경을 표현한 <육장기>(1939)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스물여덟 살 되는 겨울에 나는 도덕적으로 내 인격을 개조하리라는 결심을 하고  
**마흔 세 살 되는 봄** 내 어린 아들이 죽을 때까지 십오 년 간 나는 이 개조 생활을  
 계속 하노라 하여 거짓말을 삼가고, 약속을 지키고, 내 책임을 중히 여기고, 나 개인  
 을 위하여 희생하고, 남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몸가짐을 똑바로 하고, 이러한 공부를  
 계속 하노라 하였으나, 스스로 돌아보건대, 제 마음 속은 여전히 탐욕의 소굴이어서  
 십오 년 전의 내가 그 더러움에 있어서, 그 번뇌에 있어서 조금도 다름이 없음을  
 발견하였고, **앞으로 살아 나아갈 인생에 대하여 아무 자신도 광명도 없음을 스**  
**스로 의식할 때 나는 자신에 대해 역정이 나고 말았다.**(강조 인용자)<sup>39)</sup>

위의 글에서처럼 1919년, 28살의 이광수는 2·8독립선언문의 초안인 “조선청년  
 독립단 선언문”을 작성하였으며, 이것의 영문판을 해외에 전파하기 위해서 상해로  
 건너갔다. 그 해 5월 이광수는 안창호를 만났으며, 홍사단 이념에 크게 감명을  
 받고 단원이 되었으며, 11월 말에 그는 임시정부 개천절 축하회에서 민족개조  
 론을 연설하기도 하였다.<sup>40)</sup>

이후 귀국하여, 이광수는 1922년 「민족개조론」을 발표하였다. 이 글에서  
 그는 조선인의 열등한 민족성 때문에 조선이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하고, 민족성 개조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그리고 그는 조선인의 민족성  
 을 개조하기 위해서는 민족을 구성하는 개개인을 개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  
 다.<sup>41)</sup> 자기개조의 목표는 문명한 국가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덕행과 학식,  
 기능과 건강을 가진 사람을 육성하는 것이었고, 이를 통해서 정치, 경제, 문화

39) 이광수, 「육장기」, 『이광수 전집』 6, 삼중당, 1968, 494면.

40) 이광수, 『나의 일생』, 375-425면.

41) 이광수, 「민족개조론」, 『이광수 전집』 17, 삼중당, 1968, 180-181면.

를 이끌어나갈 3만 명의 중추계급을 형성하는 것이다.<sup>42)</sup>

이러한 기획은 푸코가 근대국가에 고유한 '통치'의 기제를 소크라테스의 자기개조의 방법에서 찾았던 것과 통한다.<sup>43)</sup> 푸코는 특정 목적에 맞게 개인을 변화시키는 '자기의 테크놀로지'(technology of the self)가 타인이나 공동체의 구성원에게로 확장되면, 타인 지배 혹은 권력의 테크놀로지(technology of power)<sup>44)</sup>가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타인이나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국가가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개조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행위를 규정하고 특정한 목적이나 지배에 종속시켜 주체를 객체·국민 혹은 인구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이는 근대 국가의 통치성(governmentality), 즉 통치 기술(art of government)이 작동하기 위한 본질적 요건이라고 주장했다.

푸코의 주장은, 이광수의 기획대로 통치의 기술을 자기로부터 민족으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권력과 정치 공동체를 필요로 함을 보여준다. 실제로도, 이광수의 민족개조 운동은 정치권력 획득 운동으로 나아갔다. 1924년 1월 이광수가 『동아일보』에 『민족적 경륜』을 발표하고, 자치권을 주장한 것도 그 논리의 필연적 귀결이다:

그러면 왜 지금에 조선민족에게는 정치적 생활이 없나. 그 대답은 가장 단순하다. 일본이 한국을 병합한 이래로 조선인에게는 모든 정치적 활동을 금지한 것이 제일 [원]인이오 병합 이래로 조선인은 일본의 통치권을 승인하는 조건밋해서 하는 모든 정치적 활동, 즉 참정권·자치권의 운동 갖은 것은 물론이요 일본 정부를 대수(對手)

42) 위의 책, 188면.

43) M. Foucault, "Technologies of the Self," *Technologies of the Self*, ed. by Luther H. Martin et al., Amherst: The University of Massachusetts Press, 1988, p.20; 푸코는 국가의 문제에 대한 신의 예언을 실제 행동에 옮길 수 있도록 이끈 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배려의 필요성이었다고 주장하며, 소크라테스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자신의 사명이 신들로부터 부여되었고,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그 사명을 포기할 수 없다.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자신은 어떤 보상도 요구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신의 사명은 국가에 유익하다."

44) Ibid., p.19.

로 하는 독립운동조차도 원치 아니하는 강렬한 절개 의식이 잊혀진 것이 제이  
[웨인이다.<sup>45)</sup>

이광수는 조선인의 경제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정치 단체의  
건설을 통해서 총독 정부와의 협상력을 키워나가야 하며, 장기적으로 조선인의  
정치적 실력 자체를 키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그는 일본의 통치권을  
승인하는 조건 밑에서 참정권이나 자치권을 획득하는 운동을 벌여나갈 것을  
요청했다.<sup>46)</sup> 이것은 『동아일보』 및 천도교 신파의 지도자 최린의 '자치권 획득  
운동'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sup>47)</sup> 동시에, 이 글은 <동포에 고함>에서 십사오년  
전부터 참정권을 요구해왔다는 진술을 뒷받침한다.

1924년 즈음 조선인들의 정치운동은 크게 세 가지, 즉 독립운동, 참정권  
운동, 그리고 자치권 운동으로 나뉜다.<sup>48)</sup> 참정권의 주장은 제국 국민이 갖는  
정치적 권리를 식민지인에게도 똑같이 달라고 하는 것으로, 제국과 식민지  
의 동화를 통해서 식민지의 완전한 소멸을 희망하는 것이다. 이 세력들은 '한  
일합병'의 정신을 살려 조선인이 제국 의회에서 의원으로 참석할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다.<sup>49)</sup> 반면에, 자치론자들은 조선의회를 건설하고 조선의 문제는  
조선 내에서 해결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조선이 독립국가가 아님  
을 인정하면서도 일본과도 다르다는 점을 내세우는 것으로, 논리적으로는 조  
선의 식민지성을 승인하는 토대 위에 있었다.<sup>50)</sup>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참정권론과 자치론은, 이광수가 강조한 것처럼, 기본적

45) 이광수, 「민족적 경륜」, 『동아일보』, 1924.01.03.

46) 위의 글.

47) 박찬승, 『한국근대정치사상사연구 민족주의 우파와 실력양성운동』, 역사비평사, 1992, 305-325면.

48) 이나미, 「일제시기 조선 자치운동의 논리: 독립운동론, 참정권론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44, 2006.6, 419-420면.

49) 송규진, 「일제하 참정권 청원운동의 논리」, 앞의 책, 9면.

50) 이나미, 앞의 글, 424-425면.

으로 일본에 협조하고 일본의 우위와 지배를 인정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일본은 이런 세력과의 협력을 통해서 조선 통치를 안정적으로 하고자 하였다. 이점은 1921년 11월 사이토 총독의 고문인 이베가, 이광수나 최린과 같이 조선인 사이에 신용 있는 인사들의 양해를 얻어서 일을 꾸미는 것이 좋겠다고 총독에게 건의한 것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sup>51)</sup> 특히, 최린이나 『동아일보』 등에서 주장하는 자치론은 일본인과 동등한 대우를 요구하는 참정권에 비해서 정치적 부담이 적은 것이었다. 이런 이유로, 1929년 사이토 총독은 조선 지방의회 설치에 협력하기로 결정하고, 1931년 5월 제한적인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여 부회와 읍회를 만들었다.<sup>52)</sup>

그러나 이러한 자치제도는 조선중앙의회를 배제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자치권 운동은 실패한 것이었다.<sup>53)</sup> 이후, 자치권 운동은 참정권 획득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되며,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 '징병제 요망운동'을 벌인다. 예를 들어, 최린은 1934년 중추원 참의로 취임하면서 친일로 방향전환을 하였고, 1936년부터는 징병제 요망 운동을 벌이기 시작하였다.<sup>54)</sup>

이광수도 1934년부터 징병제 청원을 통한 참정권 획득이라는 쪽으로 정치운동의 방향을 정해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육장기>에 따르면, 이광수는 마흔 세 살 봄에 큰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다. 그 이유는 오랫동안의 수양운동이 별다른 성과가 없어 크게 실망을 하였고, 얹힌 데 덮친 격으로 첫 아들이 사망해서 심리적 타격을 크게 받았기 때문이다. 이때가 바로 1934년 봄이다. 또한 <군인이 될 수 있다>(1943)에서 이광수는 큰 아들이 사망하기 전부터 '징병제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고 적었다. 이 두 글은, 이광수가 1934년 무렵부터는 조선에서 징병제를 실시를 일본 측에 요구할 필요성을 인식했음

51) 강동진, 『일제의 한국침략정책사』, 한길사, 1980; 이나미의 위의 책, 438면에서 재인용.

52) 김동명, 「일제하 '동화형 협력' 운동의 논리와 전개-최린의 자치 운동의 모색과 좌절」, 『한일관계사연구』 21, 2004.10, 174-180면.

53) 위의 책, 180면.

54) 지승준, 앞의 책, 191-192면.



을 보여준다. 징병제 실시 요구는 참정권 획득을 전제로 한 운동이라는 점에서, 1934년 즈음 이광수는 참정권 획득을 추구하는 쪽으로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정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광수는 일본 제국의 통치 주체가 되고자 하는 욕망을 실현할 기회를 좀처럼 갖지 못했다. 그런데, 1937년 7월 발발한 중일전쟁은 이광수에게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전쟁 수행을 위해서 병참기지로서 그리고 병역 자원으로서 조선과 조선인의 유용성이 더욱 높아졌다. 이로 인해 일본은 조선인을 통치의 대상, 즉 국민으로 간주하기 시작했으며, 병역 부여에 필요한 국민화 작업을 차례로 실시하였다. 더욱이 1940년을 넘어서면서 전선이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으로 확장되자, 징병제 실시가 적극적으로 검토되었다.

이광수는 일제의 정책을 환영하면서, 자신의 개조론을 응용하여 조선인을 일본 국민으로 개조한다는 새로운 목표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는 '나는 천황의 신민이다'라는 구호를 자기 개조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sup>55)</sup>:

“조선인은 저마다 저를 개조하여야 한다. 제 인생관 사회관을 한번 근저로부터서 두들겨 고쳐서 행왕좌와(行往坐臥)에 몽매에라도 나는 천황의 신민이다, 일본인이다, 제국의 운명을 부담한 국민이다 하는 생각이 떠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저를 개조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sup>56)</sup>

더 나아가, 그는 조선인은 “자발적, 적극적으로 내지 창조적으로 저마다 신체의 어느 부분을 바늘 끝으로 찢어도 일본의 피가 흐르는 일본인”<sup>57)</sup>으로 개조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55) 이광수, 『황민화와 조선문학』(『매일신보』, 1940.7.6.), 『춘원 이광수 친일문학 작품전집』 2, 76면.

56) 위의 글, 76면.

57) 위의 글, 76면.

이러한 국민화는, 서영채가 지적한 것과 같은 '민족 없는 민족주의'로서, 조선 민족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했다. 이광수는, 일본인으로 개조되기 위해서 조선 청년들은 자기를 부정하는 과정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그에 따르면, 조선 청년은 묵은 조선인으로 죽어서 일본 국민으로 재생할 것, 개인주의, 이기주의인 나로 죽어서 나라와 의(義)와 남을 위하는 우리로 재생할 것, 그리고 기회주의로 죽어서 자력주의로 부활하는 세 가지 죽음이 필요했다.<sup>58)</sup> 그리고 조선인들은 이를 일본 군인이 됨으로써 증명하여야 했다.

이 같은 논리적 전개는 계몽에 내포된 필연적인 아이러니이다. 『계몽의 변증법』에 따르면, 자기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계몽은 자기 포기, 자기 부정을 통해 이뤄지며, 결국 주체가 극복의 대상을 모방하고 동화되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다.<sup>59)</sup> 이광수가 친일 행위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민족의 보존·해방 이후의 변명'이 아이러니 하게도 자기 포기과 자기 부정, 그리고 일본 제국으로의 동화로 귀결된 것은 계몽의 변증법의 식민지적 귀결이었던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광수의 『민족개조론』에는 국가를 통치하고자 하는 욕망이 작동하고 있었으며, 『민족의 경륜』에는 자치권 혹은 참정권 획득의 필요성이 직접적으로 표현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기획을 실현할 만한 수단, 즉 정당 등과 같은 정치 공동체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좌절되고 지연되었다. 그런데, 총력전 기간 동안의 내선일체, 즉 조선인의 국민화 정책은 조선인도 일본 제국의 통치 행위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로 그에게 인식되었다. 이런 이유로 그는 일본의 전시 정책에 적극 협력하였다.

58) 이광수 『인생과 수도』(『신시대』, 1941.6), 『춘원 이광수 친일문학 작품전집』 2, 257-258면.

59) 정호근, 앞의 글, 160-161면. 이광수의 기획은 오딧세우스의 모험 중 퀴클롭스 에피소드를 떠올리게 한다. 이 에피소드에서 오딧세우스는 자기의 보존을 위해서 스스로의 'nobody'라고 부름으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포기/부정한다.

#### 4. 감정의 공동체의 상상과 그 이율배반

중일전쟁 이후, 이광수는 일제의 전시정책을 활용하여 조선인에 대한 징병제 실시를 관철하고, 이것과 참정권을 교환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광수는 '사랑' 혹은 '상애'와 같은 도덕 감정에 호소하는 '감성 정치'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감성 정치는 1910년대부터 총력전 시기까지 그의 문학을 관통하는 원리이다.

철저일체론자들, 즉 참정권 획득을 목표로 일본과 조선의 철저한 일체화를 주장했던 사람들은 조선 민족이 문화적으로도 일본인으로 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고, 일제의 황민화 정책·일본어 상용, 신사 참배 등에도 적극 협력하였다. 그런데, 이광수는 내선일체를 주장하면서도, 이를 문화적 일체화보다는 '감정적 일체화'의 문제로 보았다. 그래서 그는 <동포에게 고함>(1939)나 <行者>(1941)에서 양 민족이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존경하는 일이 중요함을 강조했다<sup>60)</sup>:

이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들은 서로를 연구하고 친애하는 형제의 애정을 가지고 서로 알려고 하게. 그렇게 하는 데는 우선 접촉이 제일이네. 개인과 개인, 가정과 가정의, 이해관계를 떠난 순수한 우정의 접촉이야말로 상호 이해와 땀어짐의 불이법문(不二法門)이라네. (...) 군이 만일 동경에 산다면 동경에 있는 조선 학생들을 군의 가정에 불러 주지 않겠나. 따뜻하고 깨끗한 군의 가정에서의 하루는 능히 그들 마음의 결빙을 녹일 것이네.<sup>61)</sup>

이광수는 조선인과 일본인이 '동포(同胞), 즉 같은 나라 혹은 민족의 사람'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갖기 위해서는 서로를 '형제'로 느끼는 감정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것은, 근대 민족에 대한 그의 기본 사상이었다.

60) 이광수, 「동포에게 고함」, 『경성일보』, 1940. 10. 1~9), 앞의 책, 27면.

61) 위의 글, 27면.

1910년대부터 이광수는 민족을 사랑 혹은 동정(同情)이라는 도덕 감정에 토대를 둔 '감정의 공동체'로 보았고, 초기 단편 소설이나 장편 <무정> 등은 이런 공동체의 재현적 상상(representational imagination)이었다.<sup>62)</sup> 이런 관점에서 그는 일본인과 조선인이 같은 동포, 같은 민족이 되는 데는 감정의 공동체가 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공동체의 감정적 토대가 되는 '동정'은 자기애의 이타적 확장이다. "네가 나에게 행하고 싶은 것을 타인에게 행하라."<sup>63)</sup> 따라서 나에 대한 사랑과 공동체에 대한 사랑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하지만 <金鏡>(1915)이나 <어린 벗에게>(1917)에서 표현된 것처럼 이광수에게 자기에 대한 사랑과 민족에 대한 사랑은 서로 대립되는데, 그 이유는 조선인 사회가 그에게 좋은 삶 혹은 영혼의 탁월함을 실현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믿음이 적었기 때문이다.<sup>64)</sup> 이광수에게 자기애는 민족에 대한 사랑과 배치되는 것이며, 민족을 위해 산다는 것은 좋은 삶의 실현이 아닌 단순한 자기희생일 뿐이다.

자아란 기본적으로 자기애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민족이나 국민 됨과 같은 '공적 자아'로 확장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자기애의 실현임을 확신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조선인 사회가 좋은 삶 혹은 영혼의 탁월함을 실현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없다면, 한 개인의 조선민족 됨은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이광수는 이런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자기애가 충족된다면 그의 '동정'은 언제든지 다른 공동체-일본 혹은 인류로 확산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sup>65)</sup> 그의 소설 <血書>(1924)는 이를 잘 보여주는 예이다.

62) 김현주, 「1910년대 '개인', '민족'의 구성과 감정의 정치학」, 『현대문학의 연구』 22, 2004, 260-294면; 배개화, 「이광수 초기 글쓰기에 나타난 '감정'의 의미」, 『어문학』 95, 2007.3, 349-376면 참조.

63) 배개화의 위의 글, 368면.

64) 위의 글, 368면.

65) 위의 글, 372-373면.

국가와 국가의 관계! 그것은 껌테기 것이다. 사람과 사람은 언제나 인정이라는 향기롭고도 아름다운 다홍실로 마주 댈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나는 평소에 좋지 못한 감정을 품고 있던 일본사람들이 다 사랑스러워짐을 깨달았다. 비록 우리를 쳐들어오는 병정과 정치가라도 그 울긋불긋한 가면을 벗겨버리고 벌거벗은 한낱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서로 껴안으며,

『사랑하는 형제여! 자매여!』

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sup>66)</sup>

1924년은 이광수가 『민족의 경륜』에서 일본 제국의 통치권 내에서 조선인이 정치 생활을 할 필요성을 주장했던 시기이다. 이때부터 이광수는 이미 감정적 공동체의 범위를 일본인으로 확장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었다. 더구나 1934년 즈음에는 그는 오랫동안 해오던 자기 개조 운동이 아무 발전이 없다는 것에 역정이 나고 말았다. 결국 그는 자치권 운동을 통해 식민지에서 조선인이 통치 권력을 획득하는 것에 한계를 느꼈고, 일본인의 동포가 됨으로써 그 한계를 타개해야겠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광수는 조선인과 일본인이 감정적 공동체로 일체화 한다면 한 민족이 될 수 있다고 믿었고, 이것을 희망하였다. 그가 일본인을 향하여 “군이여, 내 집에서 식구들과 같이 저녁밥을 먹세. 그리고 때 낀 내 이불을 덮고 내 좁은 온돌방에서 나와 베개를 나란히 하고 누워서 조용히 이야기하지 않으려가?”라고 말했던 것도 그런 믿음과 기대를 표현한 것이다.<sup>67)</sup>

이러한 감성 정치는, 일본 제국이 새로운 아시아 전략인 ‘동아신질서(東亞新秩序)’ 혹은 대동아공영권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것에 호응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38년 11월 3일, 고노에 총리는 동아신질서의 건설은 “일본, 만주, 중국의 삼국이 서로 손을 잡고, 정치 경제 문화 등 전반에 걸쳐 상호(相助)연관(聯關)의

66) 이광수, <血書>, 『이광수 전집』, 10, 삼중당, 1962, 141면.

67) 이광수, 『동포에 고함』, 앞의 책, 28면.

관계를 수립하는 것을 근간으로 한다.”라고 말했다.<sup>68)</sup> 이후, 이 구상은 대동아 공영권의 건설로 발전하였는데,<sup>69)</sup> 고노에 총리는 ‘팔굉일우’의 이념 아래 “대동아 내지는 전 세계를 묶어서 하나의 커다란 가족사회를 건설”하고, “세계 전 인류를 우리의 가족으로 포용하여 우리의 자식과 형제로 삼아 각각 행복하게 살게 하자는 것”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sup>70)</sup> 이러한 시각은, 이광수가 조선 민족이나 일본 국민을 가족공동체로 상상하는 것과 동일하다.

이러한 어법은 1920년대 이광수의 계몽적 연설에서도 확인된다. 그는 당시 제국주의의 식민지 경영 논리였던 사회진화론을 “인류의 이기적 쟁투 본능의 영향”이라고 비판하고, 인류 구제의 빛은 상애의 원리에 있다고 주장했다.<sup>71)</sup> 또한 그는 제국주의 전쟁인 제1차 세계대전은 상쟁을 원리로 하는 서양 문명이 그 한계에 도달했음을 보여주었다고 진단하고,<sup>72)</sup> 반목과 쟁투로 얼룩진 서구 문명으로는 상애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세계질서를 건설할 수 없다고 비판하였다. 대신에 그는 상쟁을 바탕으로 한 동양 문명을 인류 구제의 대안으로 제시했다.<sup>73)</sup>

이후, 새로운 세계 질서에 대한 이광수의 구상은 대동아공영권 논의를 매개로 다시 부활한다. 당시 일본은 “유럽 중심에서 아시아 중심으로의 세계사의 전환”을 통해 유럽으로부터 아시아를 해방하는 것이 전쟁의 목표라고 주장하였

68) 『國民政府と雖ども拒否せざる旨の政府聲明』, 『日本外交年表並主要文書』 下卷, 日本外務省編, 原書房, 1973. p.401; 정창석, 앞의 책, 290면에서 재인용.

69) 『基本國策要綱』, 『日本外交年表主要文書』, 下卷, 日本外務省編, 原文房, 1973; 정창석의 위의 책, 291면에서 재인용.

70) 『朝光』 1942. 9. pp.27-29; 팔굉일우의 실제적 모습은 오자키 호츠미가 주장한 것과 같은 연방주의 즉 아시아 제 국가들이 독립을 유지하면서 경제적, 정치적인 블록을 형성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친일 지식인들 중 차별철폐론자들은 이런 식의 연방제적 일본 제국의 형성을 지지함으로써, 조선의 자치권을 얻고자 하였다.

71) 김현주, 『이광수의 문화적 파시즘』, 앞의 책, 27면; 김현주는 이광수에게 사랑은 도덕적 이상이자 정치적 이상이었다고 주장한다.

72) 이광수, 『예술과 인생』(『개벽』 제19호, 1921.1), 『이광수 전집』 16, 삼중당, 1968, 44면.

73) 이광수, 『상쟁의 세계에서 상애의 세계에』(『개벽』, 1934.4), 『이광수 전집』 17, 삼중당, 1968,

다.<sup>74)</sup> 이광수는 서양 제국주의가 만든 상쟁의 세계를 극복할 주체는 동양이라고 주장했었는데, 서양 제국주의로부터 아시아의 해방이라는 일본의 전쟁 명분에서 그 논리적 연속성을 발견했다. 이런 이유로 그는 일본의 대동아공영권은 권내의 민족들이 [가족처럼] 공존하게 하는 것<sup>75)</sup>이라는 주장을 긍정하고, 그 이념인 팔굉일우는 사랑에 가장 가까운, 가장 진보되고 가장 완성된 것으로 찬양한다.<sup>76)</sup>

이광수나 일본 당국자들은 제국과 식민지 사이의 사랑, 상애, 가족애, 형제애 등을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수사들은 일본이 지금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서 여러 국가들과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과 모순된다. 즉, 이것은 사랑의 전쟁, 상애의 전쟁 혹은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싸운다는 ‘형용 모순’을 만들어내고 있다.<sup>77)</sup> 그리고 이광수는 이 모순을 명확히 인식하였다:

싸울 때는 죽어야지, 그러나 죽이고 난 뒤에는 불쌍히 여기는 거야. 이것이 모순이지, 모순이지마는 오늘날 사바세계의 생활로는 면할 수 없는 일이란 말요. 전쟁이 없기를 바라지마는 동시에 전쟁을 아니할 수 없단 말요. 만물이 다 내 살이어지마는, 인류를 더 사랑하게 되고, 인류가 다 내 형제요, 자매이지마는 내 국민을 더 사랑하게 되니, 더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서 인연이 먼 이를 희생할 경우도 없지 아니하단 말요. 그것이 불완전 사바세계의 슬픔이겠지마는 실로 숙명적이지요.<sup>78)</sup>

이광수는 사랑과 상애를 모든 민족이 무차별적인 지위를 누리는 대동아공영권의 원리로 제시했다. 마치 부처님의 눈에 모든 사람들이 불쌍한 중생으로

74) 藤澤親雄, 「道義大東亞建設根本理念」, 『興亞』, 1941.9, 18면.

75) 이광수, 「반도민중의 애국운동」(『매일신보』, 1941.9.4.-7), 『이광수 친일문학 전집』 2, 291면.

76) 「춘원 요한 교담록」(『신시대』, 1942.2, 58면), 『이광수 친일문학 전집』 2, 486면.

77) 방민호도 이러한 이율배반에 대해서 지적하였다. 방민호, 「이광수 장편소설 『사랑』에 나타난 종교통합적 논리의 의미」, 앞의 책, 132-133면.

78) 이광수, 「육장기」, 앞의 책, 515면.

보이듯이, 천황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동일하다는 것이 그의 지속된 주장이었다. 이것이 한갓 수사가 아니라면, 언술과 현실이 일치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광수는 이미 현실 세계 속에서 사랑과 상애는 선택적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는 '모순'을 고백하고 있다. 이처럼 그는 현실이 상쟁의 세계에 더 가까움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이광수가 사랑의 주체로 상상하는 일본이라는 국가는 자기 자신의 보존을 가장 큰 목적으로 하는 냉혹한 생존기계일 뿐이다. 푸코에 따르면, 17세기 이래로 근대 국가의 방침은 상쟁의 세계에서 국가의 보존, 확장, 행복을 보존하는 것이다. 국민들에 대한 다양한 통치 기제-인구 조사, 보건, 교육, 사회보장-는 자기 보존과 확장을 위해서 자기의 세력과 능력을 잘 인식하고 관리하기 위해서이다. 무엇보다 국가의 힘은 다른 국가와의 영구적인 경쟁 상태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각 국가는 전에 없는 유사 국가들과의 끝없는 투쟁 혹은 적어도 경쟁으로 점철된 미래를 갖게 되었다.<sup>79)</sup>

일제가 조선과 조선인의 유용성을 발견한 것은 전쟁에서의 최종 승리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일본 정부는 조선을 대륙에 위치한 본토 부분으로 간주하고, 조선이 일본과 일체화 되지 않는다면 동아시아 블록 건설은 처음부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sup>80)</sup> 한마디로, 일본 정부가 조선인을 국민으로 다루기 시작했던 것은 그들이 일본의 영토적, 경제적 세력 확대에 유용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일제는 사랑, 상애와 같은 인격화된 수사들은 전쟁 수행의 효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프로파간다로서 활용하였다.

하지만 상애나 동정에 대한 이광수의 이해는, 그가 이러한 이율배반을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게 하였다. 왜냐하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에게 조선 민족에 대한 사랑은 민족을 위해서 자기애를 희생하는 것을 의미하며,<sup>81)</sup> 자기애 혹은

79) M. Foucault, *Op.cit.*, pp.151-152.

80) 박성진, 『사회진화론과 식민지 사회사상』, 선인, 2003, 297면.

81) 이런 생각은 <사랑>(1939)에서 자기 보존적 사랑(자기애/이성간 사랑)의 호르몬인 아모르



자기 보존 욕망은 타자 민족이나 국가를 위해서 버려야 하는 타락한 감정일 뿐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광수는 '사람이란 누구나 죽는다, 국가를 위해서 죽을 때 그 죽음이 보람 있는 것이다'라며 죽음을 선포할 수 있었다.<sup>82)</sup> 이러한 선포는 군 입대 당사자인 청년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어머니와 아내 그리고 누이들에게도 무차별적으로 행해졌다. 그는 어머니에게 아들이 있으면 지원병을 보낼 것을, 심지어 외아들이라도 보내라고 권한다. 여동생에게는 오빠에게 "나라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병정이 될 것"을 권하라고 시킨다. 그리고 아내에게는 "당신이 나랏님을 위하여 전장에서 돌아가신다면, 나는 당신님을 신으로 모시고 일생 절하겠어요"라고 말하라고 시킨다.<sup>83)</sup>

하지만 이광수의 기대와 달리, 일본은 징병과 참정권 부여를 구분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1942년 5월 조선인에 대한 징병을 실시할 계획을 검토할 때, 천황은 징병과 참정권을 교환할 것인가는 문제를 제기했고,<sup>84)</sup> 의회도 이 문제를 토론하였다. 하지만, 미나미 총독은 징병에 대한 반대급부로 투표권을 확대하는 것에 반대하고, 이럴 경우, 조선인들이 일본정부와 거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민족적 욕망을 확대하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sup>85)</sup> 조선인들의 참정권 요구는 아직 일본인으로서의 의식을 철저하게 갖고 있지 않다는 증거로 간주되었다.<sup>86)</sup> 비록 1945년 4월에는 참정권을 부여하는 개정법을 공포하였지만, 그 실행은 해방이 될 때까지 정해지지 않았다.

궐과 이타적 사랑(공동체에 대한 사랑)의 호르몬인 아우라몬을 반비례 관계로 묘사한다.

82) 이광수, 「생사관」(『신시대』, 1941.2, 32-37), 『이광수 친일문학 전집』 2, 167면.

83) 이광수, 「母, 妹, 妻에게」(『삼천리』, 1940.7), 『친일문학작품선』 1, 실천문학사, 1986, 88-89면.

84) 加藤陽子, 『徴兵制と近代日本: 1868-1945』, 東京: 吉川弘文館, 2000, 248面; recited from Brandon Palmer, Op.cit., p.110.

85) 南次郎 傳記刊行會, 『南次郎』, 427; 朝鮮總督府 情報局, 「朝鮮人に對する徴兵制事項準備に關する」, N.d, reprinted in ICCSC 55, 535面; recited from Brandon Palmer, Op.cit., pp.110-111.

86) 事法省刑事局, 『思想月報』, 95號, 1942年 6月, 15面; recited from Takashi Fujitani, Op.cit., p.281.

일본 제국은 국가의 모든 물적 인적 자원을 세력의 유지 내지 확장을 위해서 강제적으로 총동원함으로써 국가가 '전체주의'와 결합할 때 보일 수 있는 파괴적 면을 예시하였다. 이러한 총동원은 천황의 사랑에 대한 응답, 혹은 조선 민족에 대한 사랑의 실천으로 합리화되었다. 그러나 실상은, 국가라는 냉혹한 생존 기계의 유지, 강화를 위해서 식민지 조선인들은 '사랑'으로 가장된 고통·죽음을 참아내야만 했다.

## 5. 결론: 일제의 죽음의 정치에 대한 협력

이광수는 1919년 이래로 철저한 계몽주의로 일관하였고, 그 내용은 조선 민족을 국민국가의 국민이 될 수 있을 만큼 근대화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의 기획은 참정권 획득, 의무교육의 실시와 같은 제도적 뒷받침이 없는 한 실현 불가능 하였다. 이런 이유로 이광수는 자연스럽게 정치적 실력의 획득을 추구하게 되었다. 이는 『민족의 경륜』(1924)에서와 같이 일제의 지배를 허용하는 한에서 자치권을 주장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으나, 중일전쟁 이후에는 참정권 획득 운동으로 귀결되었다.

1937년 7월 중일전쟁 이후, 일본 제국은 조선인을 군인으로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서 조선인을 국민으로 만드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광수는 이러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일본 제국의 통치에 참여하고자 하였다. 그는 징병을 참정권의 징표로 보는 서양 국가의 경우를 전제로 일본에게도 동일한 것을 요구하였다. 전쟁 초기부터 그는 친일 행위가 징병제와 참정권의 교환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특히 1943년 8월 징병령 실시 이후에는 이광수는 참정권의 획득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징병 정책에 더욱 협조하였다.

하지만 현실은, '보통 선거권'이 불리일으키는, 모든 성인에게 부여되는 동등한 투표권이라는 환상과는 달리, 매우 제한된 소수의 조선인들만 투표권을 획득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것도 1945년 9월 이후로 예정되어 있었다. 반면에 징병은 20세 이상의 조선인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하였고 즉각적으로 이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광수가 전시 정책에 협력한 것은 참정권을 획득하여 제국 운영에 가담하고 싶은 조선의 상층 엘리트들의 이해를 관철하기 위해서였다.<sup>87)</sup>

이광수는 내선일체 및 대동아공영권으로 만들어질 조선인을 포함한 신일본 민족은 사랑과 상애라는 도덕 감정에 기반을 둔 '감정의 공동체'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일제는 조선인을 상쟁의 도구로 쓰는 데서 그 유용성을 발견했으며 그러한 방향으로 통치했다. 이광수는 이 모순을 명백히 인식했으면서도, 이는 새로운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한 불가피한 희생이라고 합리화하였다. 결과적으로, 그는 조선인에 대한 죽음의 정치(thanato-politics)를 실행하는 일본의 잔인한 통치 행위에 협력하게 되었다.

참정권 획득 운동은 조선의 식민지성을 부정하고, 조선인이 일본 제국이라는 근대국가의 주체가 되는 것을 목표로 했다.<sup>88)</sup> 이광수가 예시하듯이 '시민'이라는 지위는 제국과 식민지 사이에 존재하는 정치 역학·대립 혹은 협력의 중요한 요인이었다. 하지만, 총력전 기간 동안 일본의, 조선인에게 참정권 부여 문제에 대한 부정적 입장은 제국주의가 본질적으로 식민지인에게 시민의 지위를 부여할 수 없는 체제임을 보여준다.

87) 해방 이후 이광수는 그는 식민지 기간 동안 양성된, 조선민족의 운명을 짊어진 3만 명의 엘리트들을 보호하여, 조선민족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서 친일 협력을 하였다고 주장했다(이광수, 『나의 일생』, 최종고 편, 푸른사상, 2014, 460면). 이러한 주장은 그의 협력이 조선인 상층 엘리트의 이익을 위해서임을 잘 보여준다. 또한 그는 점진적 개량주의의 입장에서 조선 민족이 근대적 주체가 되는 데는 100년이 걸린다고 보았으며, 이때에야 조선인은 독립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런 생각은 그가 일본 및 조선총독부의 정책에 협력한 중요한 이유였다.

88) 이나미, 『일제시기 조선 자치운동의 논리: 독립운동론, 참정권론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44, 2006.6.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이광수, 「군인이 될 수 있다」(『신태양』, 1943.11) 『진정 마음이 만나서야 말로』, 이경훈 편역, 평민사, 1995.
- 이광수, 「母, 妹, 妻에게」(『삼천리』, 1940.7), 『친일문학작품선』 1, 실천문화사, 1986.
- 이광수, 「민족개조론」(개벽사, 1922), 『이광수 전집』 17, 삼중당, 1968.
- 이광수, 「사랑」(『현대결작장편소설집』 제1-2권 1939), 『이광수 전집』 10, 삼중당, 1995.
- 이광수, 「상쟁의 세계에서 상애의 세계에」(『개벽』, 1924.4), 『이광수 전집』 17, 삼중당, 1968.
- 이광수, 「육장기」(『문장』, 1939.9), 『이광수 전집』 6, 삼중당, 1968.
- 이광수, 『나의 일생』(춘추사, 1948), 최종고 편, 푸른사상, 2014.
- 이광수, 『춘원 이광수 친일문학 전집』 2, 이경훈 편역, 평민사, 1995.
- 이광수, 『춘원 이광수 친일문학: 동포에 고함』, 김원모·이경훈 편역, 철학과현실사, 1997.

### 2. 단행본

- 강영심 저, 「군부의 민족말살정책」, 『일제 시기 근대적 일상과 식민지 문화』, 이화대학교 출판부, 2008.
- 김윤식, 『이광수와 그의 시대』 2, 솔출판사, 1999.
- 김윤식, 「이중어 글쓰기의 제2형식: 이광수의 경우」, 『일제 말기 한국작가의 일본어 글쓰기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 김재용, 「국민주의자로서의 이광수」, 『이광수 문학의 재인식』, 소명출판, 2009.
- 김진균·정근식 외, 『근대주체와 식민지 규율권력』, 문화과학사, 1997.
- 윤대석, 『식민지 국민문학론』, 역락, 2006.
- 이경훈, 『이광수의 친일문학론 연구』, 태학사, 1998.
- 이준식, 「전시동원체제하의 민족문화 말살 정책」, 『일제강점기 사회와 문화』, 역사비평

사, 2014.

임종국, 『조선민족 말살의 전략』, 『일제하의 사상탄압』, 평화출판사, 1985.

조관자, 『민족의 함'을 욕망한 '친일 내셔널리스트' 이광수』, 『해방전후사의 재인식』, 책세상, 2006.

Chou, Wan-yao, "The Kōminka Movement in Taiwan and Korea : Comparisons and Interpretations," *Japanese Wartime Empire, 1931-1945*, ed. by Peter Duus et al.,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6.

Foucault, M., *Technologies of the Self*, ed. by Luther H. Martin et al., Amherst: The University of Massachusetts Press, 1988.

Fujitani, Takashi, *Race for Empire: Koreans as Japanese and Japanese as Americans during World War II*,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11.

Myers, Ramon H, and Peattie, Mark R.(ed.), *The Japanese Colonial Empire, 1895-1945*, Princeton N. 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4.

Palmer, Brandon, *Fighting for the Enemy: Koreans in Japanese War, 1937-1945*, Seattle :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2013.

### 3. 논문

김경미, 『이광수 후반기 문학의 민족담론의 양가성』, 『어문학』 97, 2007.9.

김현주, 『이광수의 문화적 파시즘』, 『현대문학의 연구』 14, 2000.

미즈노 나오키, 『조선 식민지 지배와 이름의 차별화: 재지인과 혼동하기 쉬운 이름의 금지를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59, 2001.5.

방기중, 『1940년 전후 조선총독부의 신체제 인식과 병참기지 강화정책』, 『동방학지』 138, 2007.

방민호, 『이광수 장편소설 <사랑>에 나타난 종교통합적 논리의 의미』, 『춘원연구학보』 2, 2009.12.

이승일, 『일제시기 조선인의 일본국민화 연구』, 『동아시아 문화연구』 34, 2000.

장영우, 『이광수의 진화론적 사상과 일제 말 문학의 특질』, 『한국문예창작』 11-2,

2012.8.

전상숙, 「일제 군부 파시즘 체제와 '식민지 파시즘」, 『동방학지』 124, 연세대 국학연구원, 2004.

정창석, 「절대주의 천황제의 공간적 확대」, 『일본문화학보』 37, 2008.5.

정호근, 「사회구성과 지배의 연관: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의 『계몽의 변증법』을 중심으로」, 『철학 사상』 16, 2003.6.

지승준, 「일제시기 참정주의 세력의 '징병제요망운동'과 전쟁협력」, 『한국민족운동사연구』 69, 2011.12.

최유리, 「일제 말기 참정권 논의와 그 성격」, 『이화사원』 28, 1995.

최주한, 「1930년대 전반기 이광수의 지도자론과 파시즘」, 『어문연구』 35-2, 2007.9.

홍기돈, 「이광수의 내선일체 논리 연구 <법화경> 오독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59, 2003.9.

■ 영문초록

# The Desire for Citizenship and Technology of Emotional Politics

- Rethinking Yi Kwang-su's Pro-Japanese Collaboration during the Total War Period, 1937-1945

Bae, Gae-hwa

Yi Kwang-su, a well-known pro-Japanese Korean nationalist, collaborated with the Japanese empire in the hopes of improving the political rights of Koreans in the Japanese empire. After the outbreak of the second Sino-Japanese War in July 1937, Koreans' cooperation in the war effort became increasingly important. Consequently, they were treated as governing objects of the Japanese empire. Yi Kwang-su was eager to participate in the empire's governing activities through active cooperation with the wartime policies. From the beginning of the war, he urged for Korean enfranchisement in exchange for Korean service in the Japanese army and requested the Japanese government endow Koreans with citizenship. Concurrently, he propagated that Koreans should actively cooperate with the Japanese war effort, and therefore fulfill the duty of the Japanese citizen. Yi also imagined the "new" Japanese nation as an emotional community based on moral sentiment such as "love," and claimed to endow Koreans suffrage for they are proper members of the community. Different from Yi's expectation, the empire adhered the negative standpoint to give Koreans the right of vote. Consequently, he cooperated with the Japanese empire's politics of death that used Koreans as sacrificial instruments of war. Colonial Korea's case well demonstrated that the citizenship was

a main factor of political dynamics between the empire and colony, and disclosed that imperialism was unable to endow citizenship to the colonized.

Kew words: Yi Kwang-su, pro-Japanese collaboration, total war, mimesis, Japanese empire, citizenship, emotional politics, imperialism.

---

접수일자: 2016.11.15.

심사기간: 2016.11.16-12.2.

게재결정: 2016.12.5.